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3. 8.



법무부

목 차

I.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II.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1
III.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4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	15
2.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18
3.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22
4.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26
IV. 국민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	30

【별첨】 4년 성과 / 21년 계획 관련 체감사례



I .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1

새로운 형사사법의 제도적 완비

주요 정책 성과

□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 완료 및 시행

-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혁법령 입법을 완료하고, '21. 1.부터 시행
-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20. 1.), 「수사준칙」·「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20. 10.)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 제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검·경 상호 협력 규정 도입,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및 검사의 사법통제 신설,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보장 확대 등

※ 수사권 개혁법령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검찰 내부규정 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 및 설립 지원

-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근절과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공수처법」 제정
 - 법무부안을 기초로 공수처법안 의원 발의('18. 11.) ⇒ 공수처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19. 4.) ⇒ 「공수처법」 제정('20. 1.) 및 시행('20. 7.) ⇒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 완화 등 「공수처법」 개정('20. 12.)
- 공수처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적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검사 2명 등 파견하여 조직 및 법령 업무 지원('20. 2.)
 - 법무부장관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공수처 발족 지원

평 가

-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개혁 제도화의 토대 구축
- 개혁법령 취지에 맞게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방안 필요

주요 정책 성과

□ 형사·공판 중심의 검찰 조직 및 기능 재편

- 전국 검찰청 31개 직접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등 직접 수사 기능 대폭 축소('19. 10. ~ '20. 1.)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1정책관, 2담당관)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지휘·지원과, 마약·조직범죄과를 통합하는 등 직접 수사 지휘부서를 축소하며, 형사3·4과 및 공판2과, 형사정책담당관 등을 신설하여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기능 강화
- 우수 형사부장·인권감독관 등을 적극 발탁하는 등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키는 인권·민생·법치를 위한 검사인사 실시('20. 8.)

□ 인권친화적인 수사환경 조성

- 형사사건 공개의 원칙적 금지 등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시행('19. 12.),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의 엄격한 제한, 별건수사 금지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19. 12.)으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
- '인권수사 제도개선 TF'('20. 6.) 운영하여 불필요한 반복소환 금지,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 무분별한 압수·수색 금지,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 실질화 등 수사관행 개선방안 수립('21. 1. 시행)
-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신임검사 등 상대로 압수수색·체포구금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방안 중점 교육

□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기존 검사 중심의 법무행정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법무행정 수행으로 전문성 및 연속성 강화
 - 기존 검사보임 71개 직위('17. 7. 기준) 중 39개 직위(55%) 탈검찰화

평 가

-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로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
-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한 조직개편 등 지속적인 개혁 필요

2

민생 안정으로 국민이 편안한 사회 실현

1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무정책 중점 추진

주요 정책 성과

□ 서민·소상공인의 주거 안정 및 영업보호

- 임대인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통지기간 조정('20. 6), 계약갱신요구권 도입('20. 7.),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20. 9.)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 전통시장 상인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18. 10.),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20. 7.) 등 소상공인의 영업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적용 제외,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감염병 등 사유 추가('20. 9.)
- 집합건물 회계감사 강화, 리모델링 요건 완화, 세입자의 임시관리인 선임권 도입 등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매장 운영을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 2.)

□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 지원 강화

- 파산신청시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생계비 기준을 인상하여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조치('19. 3.)
 - ※ 연간 4만5천여 명이 약 945억 원[4만5천 명('19년 기준 연간 개인파산 이용자) × 35만 원(월간 생계비 인상분) × 6개월]의 생계비 인상 혜택 예상
-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간이회생 제도 이용대상 확대('20. 6.)
 - ※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평 가

- 임차인의 안심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서민을 경제적으로 보호
-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적극적 법무정책 필요

주요 정책 성과

□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처벌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 신설 등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20. 5.)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자녀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응급조치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명시, 임시조치위반시 형사처벌,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신설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20. 10.)

□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 강화

- 아동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매일 생활실태 점검, 심리치료 등 고강도의 '1:1 전자감독 제도' 실시('19. 4.), 재범 사례 0건
 - ※ 1:1 전자감독 총 33명 실시('20. 12. 현재 26명 실시 중, 해제 7명)
-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증원('18년 8명 → '20년 12명), 중증 집중치료 병동 신설('20. 12. 착공) 및 수용가능 인원 확대(970명 → 1,200명) 등 강화
 - ※ 치료감호소 재입소율 '19년 3.3% → '20년 2.5%

평 가

-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법제 개선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
-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주요 정책 성과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

- 법무부는 대검에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검찰은 방역저해사범, 마스크 판매 사기사범 등 884건(구속 183명)을 기소

(‘20. 12. 20. 기준, 단위: 기소건수, 구속인원)

유 형	총 계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격리거부 등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사기	미인증 밀수출
기소(구속)	884(183)	38(5)	22	541(21)	43(2)	184(139)	56(16)

□ 효율적·선별적 감염병 유입 차단 및 감염병 확산 방지

- 탑승자사전확인시스템을 활용한 입국 전 탑승 차단, 91개국 무사증입국 정지, 사증발급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등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직후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 별집촌 등 외국인 밀집시설, 인력사무소 등 방역 취약시설 점검, 격리 위반자 강제퇴거 등 엄정 조치

□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입국 내·외국인의 국내 체류지·연락처 등 정보를 방역당국·지자체 등과 실시간 공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24시간 콜센터 설치

※ '20. 1. ~ 12. 12개 정부기관, 250개 지자체에 390만여 건의 출입국관리정보 제공

□ 코로나19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을 신설하여 24시간 긴급대응체계 구축 (‘20. 8.), 해외 감염병 확산 및 국내유입 위험도 모니터링 실시

평 가

- 개방성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조화한 K-방역 주도적 수행

3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축

1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강화

주요 정책 성과

□ 인권과 형사사법을 조화한 전자보석 및 가석방 실시

-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기존 보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자보석 제도 도입('20. 8.)
※ 전자보석 실시인원 144명('20. 12. 기준 재택구금 15명, 외출제한 27명, 주거제한 102명)
- 수형자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취업조건부 가석방('19. 4.), 당월 가석방 신청 제도('19. 10.), 치료조건부 가석방('19. 11.) 등 차별화된 가석방 실시
※ 취업조건부 가석방으로 78명 출소·42개 업체 취업, 당월 가석방으로 886명 신청·818명 출소, 치료조건부 가석방으로 39명 신청·34명 출소

□ 수용자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설치하고(서울구치소 등 44개 기관 설치 완료, '21. 4개 기관 설치 예정), 여성수용자인 엄마가 직접 동화책을 읽는 목소리를 녹음하여 책과 함께 6세 이하 자녀에게 전달하는 '엄마의 목소리' 시행('19. 8. ~ '20. 12. 54명의 여성수용자가 170회 녹음 후 자녀에게 전달)
- 수형자·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출소 후 채용으로 이어지는 '취업매칭 직업훈련' 도입('20. 1. ~ 12. 출소자 46명 중 7명 취업), 수형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을 매년 5% 인상('19. ~ '21.), 우수 작업자에게는 성과장려금 지급('20. 12.) 등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

□ 수용자와 시설의 안전 및 편리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정기관의 PC와 민원인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스마트접견 기능을 개선('19.)하고, 모든 접견호실에 화상접견·스마트접견·녹음녹화 등이 가능한 통합접견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교정행정 및 민원서비스 강화
※ 스마트접견 : '19년 79,125건 → '20년 264,582건(234% 증가)

평 가

-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 및 사회복귀 도모
-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정책 지속 추진 필요

주요 정책 성과

□ 안전과 선순환의 국경·체류 관리

-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사전신고시 재입국 기회 부여('19.12. ~ '20.6.), 범칙금 미납시 입국규제 강화('20.3.) 등 선순환의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 시행
 - ※ '19.12. ~ '20.12. 불법체류 외국인 총 60,699명 자진신고(48,921명 출국)
 - '20.2. ~ 12. 불법체류 단속 등 외국인 범칙금 21.6억 원 징수
-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하여('17.11.)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체류 외국인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개인고충 심의
 - ※ '18.12. 경북 군위 화재현장에서 국민을 구한 스리랑카인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 결정 등 '18. ~ '20.12. 205개 안건 심의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 제도('18.1),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 제도('19.8.) 시행
 - ※ '18.1. ~ '20.12. 세금 53억 원 징수, '19.8. ~ '20.12. 건강보험료 34억 원 징수

□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친화적 이민정책 추진

- 4세대 이후 동포에게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비자 부여('17.9.), 사할린 동포 1·2세대의 입국지원('20.4.) 등 재외동포 포용정책 확대
- 이주여성 보호지침('18.2.), 한부모 결혼이민자 국내체류 지원방안('20.12.) 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 농·어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의 단기간 고용 허용
 - ※ '17년 1,085명, '18년 2,824명, '19년 3,497명, '20년 223명

평 가

- 국민이 공감하는 선순환의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지속

4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한 법무역량

1

공정경제 법제 마련 및 국가 송무역량 강화

주요 정책 성과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및 시행령 개정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20. 12.)
- 사외이사 결격기간 확대, 장기재직금지, 임원 선임시 주주에게 체납 사실 등의 정보 제공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임원후보자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20. 1.)

□ 통일적·합리적 국가 송무체계 구축

- 전국 검찰청에 분산·위임된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고, 기존 법무실 1개과(국가송무과)를 1관 2과(송무심의관·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20. 12.)
- 6개 고검에 상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과거사 국가배상 Fast Track’ 시행 등으로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의 관행적인 상소를 방지하여 소송지연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국가재정 낭비 방지

※ ‘16년 항소율 44.4%, 상고율 42.3% → ‘20년 항소율 27.9%, 상고율 23.5%

□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체계 개선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제정(‘19. 4.)하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함으로써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역량 강화(‘20. 8.)

평 가

-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편익 증진 및 국가재정 보호를 위한 국가 송무역량 강화 추진
- 경제질서·사회질서 전반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필요

주요 정책 성과

□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 전국 517개의 무변촌(無辯村)을 포함한 1,491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 1,349명 신규 위촉하여 ‘무변촌 제로’ 달성(‘20. 7.)
-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20. 4.), 강원도 산불피해 법률지원단(‘19. 4.), 포항지진 법률지원단(‘17. 11.),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17. 1.) 등 대규모 재난 피해 국민에게 법률서비스 지원

□ 서민·소상공인 법률구조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를 추가하여 요건 완화(‘20. 9.)
-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개시(‘20. 1.)
※ ‘20. 1. ~ 12. 채무자대리인 선임 893건, 소송구조 22건 등 총 1,252건 접수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대상 상시 무료 온라인·전화 법률상담 실시(‘17. 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찾아가는’ 법률교육·상담 제공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19. 12.), ‘1:1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지원 변호인제도’ 도입(‘20. 7.)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치주의 적응 지원
※ ‘17. 5. ~ ‘20. 12. 탈북민 3,523명 상대 방문교육·상담 49회 실시, 온라인·전화 법률상담 972건 실시

평 가

-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강화
- 법률지원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률서비스 확대 노력 지속



Ⅱ.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성과에 대한 바람

- 집권 4년차를 맞이하여 국민들은 권력기관 개혁의 결과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 즉 체감할 수 있는 개혁성과를 기대
- 촛불혁명의 대의에 따른 개혁의 완수를 통해 후반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흡한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에 대한 염원

-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 ‘조두순 출소’ 등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로 인한 불안감은 어느 시기보다 높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요구

※ 청와대국민청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71만 명 참여(20. 4.)

- K-방역 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조치로 조속히 코로나 상황을 종식 시키고,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갈망

※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20. 11.):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은 신종질병(32.8%), 범죄(13.2%)

● 코로나19 등으로 민생 안정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장기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균형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 서민가계와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역할 주문

※ 국민 86.3% “코로나 확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20. 12. KBS·한국리서치]

● 사람 중심의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

- 시각장애 안내견의 국회·마트 출입금지 논란, 택배 근로자의 과로사, 모 방송인의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인권·젠더 이슈에 국민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
- 국민들은 높아진 인권감수성에 기초하여 한국사회에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철폐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부노력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차별 심각하다”(69.1%), “인권침해 심각하다”(54%)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역사적인 공수처 출범, 수사권개혁을 통한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에 대한 국민의 개혁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개혁성과를 안정적으로 실무에 안착시키고, 미완의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중단 없이 추진하여 불가역적인 권력기관 개혁 완수

●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 공동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함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범죄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일상을 지키는 안전대책 추진

●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질서 구현, 갑질과 특권을 배제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절차,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추진

●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 사람의 생명과 자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소외된 계층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

1 |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안착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역량 집중

-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및 수사지휘 폐지 등에 따라 고소인 등 이의신청, 경찰 보완수사요구 등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가동
- 국민이 새로운 절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각 제도마다 빈틈없는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정비를 지속 추진
-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에 신설 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타겟형 교육 실시

□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사사법시스템 운영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고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경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
- 신설되는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제도 시행시 제기되는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고, 영장 관련 경찰 이의를 위해 설치되는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조직 개편

-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 이후 일선청의 업무변화 및 실증적인 통계에 기초하여 조직·인력 진단 후 검찰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추진
 - 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 신설
-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

□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

-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
- 1·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검찰 사건배당절차 제도화, 검사 이의제기제도 실질화 등 검찰개혁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 발굴, 이행 추진

□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 증대

-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운영절차·방식 등을 개선
- 법무부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 도모

□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인사

- 전보 및 파견기준, 복무평정 항목과 방법 등 인사원칙과 기준에 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
- 검찰인사위원회를 실질화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사인사를 실시하고, 검사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와 방식을 규범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제도 개선

- 검찰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 직접감찰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의 자체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사후통제를 강화
 - ※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시행('19. 10.)으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 대폭 확대, 검찰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와 자료제출의무 규정 신설
- 일선 정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갑질행위 중점 점검 등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감찰·감사 활동 전개
- 암행감찰, 검사 적격심사 자료 수집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등 상시적 감찰을 활성화하여 업무 청렴성 확보

□ 민생과 함께하는 검찰권 행사

-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영업중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을 위해 벌금 납부연기 및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확대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을 활성화하는 등 탄력적인 형집행 추진
- 경제적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금감원 등과 협력체계 강화

□ 국민 편익 중심의 형사사법절차 스마트화 추진

- 국민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제출·열람·복사, 원격화상 조사 등을 통해 편리하게 형사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자 형사사법절차 추진
-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및 전자문서 사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 추진
 - ※ '21.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 ※ '21. ~ '24. 10. 차세대 KICS 구축사업 추진, '24. 하반기 차세대 KICS 오픈

2.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1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

-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컨트롤 타워를 설치('21. 2. 25. 출범),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수립

※ '21. 2.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시행

- 검사의 아동학대사건 감시자 역할 정립, 피해아동 국선변호 확대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추진

※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실태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 요청·면담 등 법무부가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강화된 법원 양형기준을 시행하여 처벌을 강화하며,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방지 조치 시행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범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 '20. 12.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노력

□ 교정시설 내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

-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입소시 신속항원검사 및 2주간 격리 수용,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조절이송 등 특별방역조치 시행
-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을 구성하여 현장지휘, 방역물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 교정시설 방역대책 수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상황별·분야별 대응절차와 체계적인 매뉴얼 재정비
 - 고층과 저층, 구치소와 교도소 운영방식 차이를 반영한 방역대책 마련
 - 법원·검찰과의 협력,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등 수용밀도 완화방안 강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실시

- 방역강화 대상국가 지정 등을 반영하여 국가별·체류자격별 비자발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별집촌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지속 점검, 취약 계층 외국인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 시설 수용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체포·구속을 최소화하고, 형집행정지 등 석방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일정 금액 이하 벌금미납자 지명수배를 일시 해제하는 등 수용요인 조절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방역저해사범 엄정 대응

- 조직적·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혼란 방지
-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거나 치료·진료·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환자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역저해사범은 방역 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

□ 수용관리시스템의 첨단화로 시설 내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 실시간 위치확인 기술 등이 적용된 ‘스마트밴드’와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도입 등을 통한 지능형 수용관리시스템을 구축, 교정의 중심을 수용자 관리에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로 업무 이동

※ ‘21. 5. 스마트밴드 시범실시, ‘21. 1. ~ 5. 생체신호 감지 레이더 시험운영

-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교도관 근무일지 등 종이문서 작성 업무를 전산화하고, 수용자 이송·배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정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

※ ‘21. 3.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오픈, ‘21. 3. ~ 12. 차세대 2차 사업 개발

□ 사회 내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

- 과거 범죄 패턴 및 최근 이동경로 등을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하게 수집·분석,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강력범죄 재범 방지 도모

※ ‘21. 1. 인공지능(AI) 기반 자동관제시스템 운영

- 음주감응 전자발찌 개발(‘21. 12.)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취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고, 조기에 개입하여 주취 중 재범 방지

□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명령 제도 도입

- 재범가능성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와 재활대책 필요
-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가 형기 종료 후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 ‘21. 1. 「치료감호법」 개정안 마련,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

□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으로 국익위해 우려 외국인의 입국 차단

- 무사증 입국 국가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사전 제출한 범죄경력, 감염 병력 등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전자여행허가가 결정된 경우에만 항공권의 발권 및 탑승을 허용하는 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예정('21. 7.)

※ '20. 8. 예비비(29억 원) 확보하여 시스템 구축 중, '21. 5. ~ 6. 시범운영 실시, '21. 7. 전면시행 예정

- 여행허가 신청시 제출한 정보 분석을 통해 테러 등 위험이 있거나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현지에서 사전 차단 하고, 관광객 등 일반 외국인에게는 신속한 입국심사서비스 제공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수반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 자진 출국명령을 하면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21. 1.)

- 출국 당일 출국심사를 마친 후 공항에서 이행보증금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출국명령 대상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출국명령의 이행력 제고

□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 범죄악용 방지

-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차단조치가 필요한 외국인 출국자 명단을 매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 신속히 휴대폰 차단조치

※ 부정사용 확인기간을 단축(4개월→1개월)하고, 선불폰에 대하여도 차단조치 시행

- '21. 1.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테스트 운영 후 '21. 2. 정보연계 개시를 목표로 추진

3.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 소상공인 고통 분담, 서민 이자부담 완화 입법 추진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규정의 연장방안 등 소상공인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추진
-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 → 연 20%, '21. 7. 시행)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소득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및 현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효력 명문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21. 상반기)
-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등 임차인 구제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21. 상반기)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 예정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확대

- 24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중
 -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 해외진출 법률설명회, 1:1 법률상담 등 폭넓은 법률지원(자문실적 '16. ~ '20. 총 1,474건)
 -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 등 비대면 법률지원서비스 제공
- 세계은행과 협업으로 멘토십 네트워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추진, 온라인 교육 및 상담 플랫폼 운영 등 비대면 법률지원 강화('21. 하반기)

□ 서민다중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도모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이 간이하게 피해회복 받을 수 있는 개정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20. 11.)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 제도 본격 시행
- 범죄피해재산환부시스템 구축(3분기), 전담직원 대상 교육(2·4분기)으로 수사단계에서 발견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신속히 몰수·추징·보전함으로써 재산은닉 및 도피 등 조기 차단

※ 일선청 범죄피해재산환부 전담검사(63명) 및 수사관(66명) 지정(‘20. 12.)

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 피고인 위주의 국선변호제도로 인해 피의자는 법원의 심사단계에 이르러야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어 수사단계에서 인권보호에 미흡
 - 수사 중인 피의자의 인권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준수, 변호인조력권의 실질화를 위해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 추진
- ※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20. 5. ~ 6.)

□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법지원일원화 추진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 법원에 의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국민 법률지원 사업의 통합방안 마련
 -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법지원일원화 TF’(‘20. 10. 구성 완료)를 통하여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제도를 통합하는 입법 추진
- ※ 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국회 제출 예정(‘21. 9)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추진

- 수임·변론 단계부터 사후 감시·징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20. 11.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수임자료 제출기간 연장
-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강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사무직원 정의규정 신설, 사무직원에게 대한 지도·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 신설,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재판·수사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소개·알선행위 처벌 강화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선거사범 공정수사

- '21. 4. 7. 실시 예정인 서울·부산시장 등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
 -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선거사범 처리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 관할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 설치('21. 1.),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 돌입

3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악의적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및 「상법」 개정 추진('20. 9. 입법예고)
- ※ 기존 증권분야 이외에도 제조물책임 등 분야 제한 없는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 상인의 고의·중과실 행위에 대하여 손해 대비 5배 한도 배상책임 도입

□ 특정경제사범 관리 철저

-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정경제사범 관리 제도'(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취업·인허가 제한) 실효적 운영
- ※ 취업제한 사실 등 통지 총 2,112명('18. 9. ~ '20. 12.)

- 취업제한 위반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 신청 사례 등 심의

4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

- TF 운영,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1인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
 -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구성·운영
 - 친족(가족개념 재정립 등), 상속(지정상속제 도입 등), 주거(공유형 주거 형태에 대한 법적 지원 등), 보호(성년후견 제도 개선 등), 유대(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적극 발굴
- ※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결혼, 사별, 이혼, 독신, 시민연대협약, 동거 등 6가지 유형의 가족형태 인정
- 발굴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후 입법 추진 예정('21. 상반기)

□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화

- 민법상 법인과 집합건물 등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대면 합의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민법」·「집합건물법」 개정 추진('21. 하반기)
- 경직된 유언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에 녹음 뿐만 아니라, 영상에 의한 '녹화'도 포함되도록 「민법」 개정('21. 하반기)

□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비하는 민사법 정비

-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조명(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민법」·「민사집행법」 개정 추진('21. 하반기)
- 미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인공지능(AI)·로봇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불법행위법 개정 검토

4.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

1 |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의 인권정책 추진·시행 의무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 11. 입안보고, '20. 12.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수립·이행 및 인권정책추진체계 마련
 -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심의·이행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인권정책 반영에 관한 기본 절차규정 마련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규범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 및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

2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 장애인 차별 사례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장애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 제도 강화
 - 인권위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에 불이행 사실 통보
 - 기존 '침해의 심각성'·'공익의 중대성' 요건 없이도 시정명령 발동
 - 시정명령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법무부의 모니터링 의무 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 12.) 및 시행 예정('21. 6.)
- 인권위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여 개정 법률안 취지에 따른 시정명령 사례 적극 발굴·점검

□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진술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국선변호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21. 6.)
-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 홍보, 국선변호사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업무 매뉴얼 개발을 통해 효과적으로 피해 장애인 적극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확대

- 법률복지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게 1:1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변호인 제도'(현재 수도권 시범사업 시행 중) 확대 추진
-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보완점을 분석, 구체적 확대 방안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체계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로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 결혼이민자 구조금 지급, 장해·중상해 구조금 유족 지급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등 직접지원 대상 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범죄 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21. 3분기)
- 벌금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확충 및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벌금집행금 중 기금납입 비율) 지속 확대 추진
※ '11년(4%) → '13년(5%) → '15년(6%) → '21년(8%), '23년에는 10%로 상향 필요

□ 인권친화적 대체복무제 시행

-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제 시행('20. 1.)으로 병역과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정시설 정비 및 합리적 복무관리 방안 마련
※ 서울구치소 등 10개 교정기관 생활관 리모델링 및 교육센터(영월) 신설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복지 등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 교정시설의 적절한 수용률 유지

- 교정시설 신·증축 지속 추진, 여성 수용공간 우선 확충
 -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 7개 기관 증·개축 262명('21.)
 - 화성여자교도소 신설(500명 규모) 및 여성 수용동 증축 추진
- ※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수용구분 조정 및 분산이송 적극 추진으로 대도시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 1인당 적정공간 확보로 수용자의 인권 보호
 - ※ 평균수용률 : '17년 119.8% → '18년 114.5% → '19년 113.8% → '20년 110.8%
-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등 가석방 지속 확대

□ 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처우 개선

- 직급보수 상향,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의료인력 충원,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 의료처우 개선 추진
 - ※ 의료인력 결원비율 : '17년 14.7% → '18년 19.8% → '19년 23.2% → '20년 21.4%
-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 '19년 42개 교정기관 → '20년 5개 기관 추가 → '21년 모든 기관에 구축 추진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 부모의 수용생활로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시행('21. 4.)
 - ※ 전 수용자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관련 통계자료 구축(매년 4월 시행 예정)
-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팀을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수용자 가족의 관계회복과 안정적인 수용생활 도모
 - ※ 서울지방교정청, 수용자 위기자녀 긴급지원반·지원팀 시범 운영 실시('21. 7.)

□ 미래지향적인 선진 국적제도 개선

- 국민의 해외이주, 장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국적제도 개선 추진
 - 헌법재판소의 국적이탈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입법시한 '22. 9. 30.)에 따라 해외거주 국민의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 마련 등
 - ※ 국적이탈 시기를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국적선택 의무) 및 제14조(국적이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 9. 24)

□ 공정한 난민 심사제도 운영

- 신속하고 공정한 난민 이의신청 심의제도를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강화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의신청인에 대한 난민위원회 신속 심의 절차 마련('21. 1.)
 - 신청인 의견진술 및 추가 입증자료 제출기회 보장 등('21. 6.)
 - 제기기간 도과 등 부적법 신청에 대해서도 접수 후 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하 결정을 통지하는 절차 및 서식 마련('21. 6.)
- 난민 심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난민 심사제도의 공정성·효율성 강화
 - 국가 정황정보 분석·조사에 관한 전문인력 확대, 난민 다발국가 정황정보 자료집 발간 정례화, 조사 매뉴얼 및 심사기준 마련

□ 사회통합교육서비스 강화

-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한국어·한국문화 등 기본소양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비대면 강의 플랫폼 구축
- 타부처 및 전문기관의 이민자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된 종합적인 '이민자 사회통합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방식 개선



IV. 국민의 삶, 이렇게 바뀔니다



2021

국민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사권 개혁을 안착시키고, 법무·검찰 개혁을 지속하겠습니다.

- ✓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권이 인권과 국민편익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스토킹범죄와 아동학대에 엄정히 대응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범죄자 관리체계를 첨단화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빈틈없는 범죄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여 국민안전 위험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바탕으로 공정사회를 이루겠습니다.

- ✓ 감염병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하여 실효적인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집단적 피해를 입은 서민들이 효율적으로 구제받도록 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 법조계 전관특혜를 근절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공정한 형사사법 제도를 구축하고, 서울부산시장 등 보궐선거 선거사범을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존중과 배려, 포용의 인권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인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인권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교정행정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 국경의 벽이 낮아지는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국적 제도와 난민 제도를 개선하여 포용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 4년간 성과 체감사례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영세상인 지원

- 대학가에서 수제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반으로 줄었지만, 건물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여 차임 30%를 감액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차임 감액 사유에 코로나19 등의 1급 감염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해 퇴거위험에 놓여 있던 노래방 업주 50대 B씨도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덕을 보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차임 연체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세상인 A씨와 B씨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을 안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검사의 새로운 사법통제에 의한 국민의 인권보호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60대 B씨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 가벼운 몸싸움으로 8경찰서에 입건된 30대 A씨는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아 이를 부당하게 여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준칙에 따라 서울○○지검 C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 사건기록 등본을 받아 본 C검사는 피해자 B씨와 친척관계에 있는 8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부당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사를 즉시 중단시키고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A씨는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보호조치

-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결심한 A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하였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달리는 재미에 푹 빠져있던 A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편이 모임에서 알게 된 B씨가 같은 방향이라며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날 이후로 시도 때도 없이 집 앞에서 서성이며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
- 혼자 살던 A씨는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마땅히 적용할만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의 요청으로 스토크를 A씨나 A씨의 집,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전화연락도 금지시키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A씨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